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운동 전략

김정옥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우리나라 정상인들의 혈액과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검출되는 카드뮴, 납, 구리 같은 중금속의 양이 미국인의 평균치보다 몇배씩 높다는 일전의 보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공해가 없다고 알려진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감기환자까지도 제외할 정도로 지극히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많은 시민들은 자기만 깨끗한 물을 마시고 공기 좋은데서 살고 음식을 가려 먹으면 공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지를 이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피해는 우리의 건강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환경오염을 계속 방치한다면 이 땅은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말것이다. 비단 우리나라의 장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지구의 장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지구 곳곳에서는 산성비를 비롯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석탄과 석유의 대량 사용으로 대기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지구의 온실화 현상이 나타나고, CFC (chloro-fluoro-carbon,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며, 삼림의 남벌과 무리한 농경지의 확장으로 인하여 일년

에 남한만한 면적의 육지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당연히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땅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할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란 것도 결국은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생활태도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환경보전운동은 비단 기독교인에게만 아니라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이란 것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용히 이루어져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환경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산업구조나 무역구조 등에 의해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은 조직적으로 운동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시민운동의 전략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산업과 무역구조, 에너지 교통, 국토개발에 관련된 정책

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없이는 환경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환경정책을 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를 요구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먼저 알아서 환경문제를 해결해 준 일은 없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관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정책입안자들은 단 수십통의 편지나 전화만 받아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소리를 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조직들은 언론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과 언론이 공해문제에 대해서 시끄럽게 떠든 나라일 수록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의 중요성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둘째, 시민운동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주민운동의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국가의 환경정책이란 것은 뼈대만 갖추어져 있을 뿐이며 구체적으로 각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되어야 하는가는 지역주민들이 정해야 한다. 즉, 어느 지역 하천의수질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BOD나 COD의 수치에다 맞추기 보다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아온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수준, 예를 들자면, 물에 어떠한 생물이 살 수 있다든지, 혹은 눈으로 보기에 어느정도 맑다든지, 또는 어느 수역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서는 참견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감시를 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아니고서는 책임감 있게 감시해 줄 사람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환경오염에 관한한 법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고 시민들도 의당 그러려니 하고 관대하게 보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에서는 환경오염 범법자들을 파렴치범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환경오염이란 것이 인류에게 커다란 죄악이기 때문이다.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환경오염 사범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형벌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똥이나 재를 함부로 버리고 나무를 토벌하는 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형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세째, 시민운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각자의 생활에 적응이 되어야 한다.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

고 물건을 재활용하며 폐기물을 적게 버리는 생활로서 환경보전에 기여해야 한다. 비록 개인이 삶으로서 이 땅의 환경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각자가 생활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회와 국가를 상대로 하는 환경보전운동은 설득력이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개인이 생활에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다. 시민들 가운데는 생활에서 실천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부지런히 교육해야 한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에서 폐지나 빈병의 재활용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폐품수집을 해봤자 가져갈 데도 없고 회수하러 오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정부에 정책건의를 해야 한다.

네째, 시민운동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즉 다른 나라의 인간기구와도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선진국에서 불법화 된 맹독성 농약, 문제를 일으킨 공해기업, 산업폐기물 무역 등에 관한 정보는 정부기관보다는 시민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러한 무역의 피해를 많이 받은 나라에 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공해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닫고 있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지금은 그런 것을 모를만한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다가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중국으로부터 산성비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더러 아무런 대책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해산업과 산업폐기물들을 수출하고 다른 나라의 환경을 약탈한다는 비난을 자신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은 결국은 시민운동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그 원인이 일반인들의 눈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그 피해도 은근하고 복합적이어서 일반인들은 그 대책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략들을 수행하는데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운동조직들은 전문가들과 항상 유대관계를 가지고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